

與 지지율 뒷걸음... '범여권 후보 단일화' 화두로

리얼미터 민주 29.3%·국민의힘 33.5%·국민의당 8%·열린민주 5.4%
민주·열린민주당 주자들 긍정적... '이합집산' 우려 합당은 시기상조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범여권에서도 후보 단일화 논의에 불이 붙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서울 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이 단일 후보를 내세우면 민주당이 열세를 보이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권이 단일화 논의도 구체화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범여권 단일화는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고 열린 자세를 취했다. 주자들은 긍정적이다. 민주당은 이날 야권의 단일화 움직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신동훈 최고위원은 "안철수 대표가 혁신의 가면을 벗고 보수의 길을 접어든지 이미 오래전 일이다"면서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 있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상호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작년부터 통합을 계속 주장해왔는데 지도부가 이 문제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만일 통합이 안 될 경우 단일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에 의원이 "선거라는 건 원래 와글와글해야 된다. 북적북적하고 논쟁이 불고 마지

막에는 통합이 돼야 한다"고 단일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범여권의 단일화 화두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도는 29.3%로, 국민의힘(33.5%)에 4.2%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다. 열린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각각 5.4%, 8.0%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묶을 경우에도 열세인 상황이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도 거론되지만, 민주당은 일단 부정적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준비를 앞둔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합당까지 나가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합당의 경우 선거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아 시간적·물리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선거를 겨냥한 이합집산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 반면 후보 단일화는 이념 성향이 비슷한 만큼 지지세를 넓히는 데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이 합당에 난색을 표하는 것은 열린민주당의 이미지가 '조국 수호' 정당으로



정 총리 재난안전대책회의 참석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치는 것도 적지 않게 작용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치권이 이해관계를 따지는 모습이 좋아 보일 리 없다"며 "열린민주당과의 통합

문제는 선거 이후에 다루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 자치구간 경계 조정 불투명

조오섭 "이용섭 시장 제안한 소폭안 반대"...광산구, 중폭안 반대 여론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11일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방안 중 하나인 소폭안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광산구에서 (중폭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니 소폭안으로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이용섭 광주시장이 북구가 지역구인 자신과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을 만나 소폭안을 제시했다고 밝히고, "구간 경계 조정은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 때문에 필요하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제시된) 중폭안에는 동의한다. 합의 과정에서

나온 합리적인 안이 중폭이다. 중폭안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해를 보는 자치구에 대해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광주시 경계 조정 기획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난해 11월 소·중·대폭 등 3개 조정안 가운데 북구 문화동과 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는 소폭안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중폭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

광주시는 기획단 건의를 받아 정치권, 해당 자치구와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광산구에서 중폭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 시장이 소폭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북구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2년 만에 재게된 구간 경계 조정 논의가 불투명해졌다.

조 의원은 또 이날 "그동안 낙후된 광주역이 향후 명실상부한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광주역이 국도교통부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의 물꼬를 텄다"면서 "내년 예정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달빛내륙철도 건설이 포함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광주역~순천간 경전선 전철화와 연계한 철도기능도 복원되면 광주역은 명실상부한 도시재생의 핵심거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광주역 혁신지구 사업은 2025년까지 광주역 철도부지내 1만4000㎡(4235평) 규모의 혁신지구를 조성해 그린 디지털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혁신기업을 집적화함으로써 광주역을 주거·문화·복지 등이 결합된 스타트업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여의도 브리핑

김회재, 공공임대·전세주택 활성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 국회의원은 11일 서민과 중산층의 전세난 완화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2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 서민·중산층 전세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LH에서는 기존 공공 신축주택을 매입하거나 민간사업자와 약정을 체결하고 신축주택으로 확보하는 민간매입약정 방식과 함께, 호텔 등을 매입·개량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과거 폐지됐던 관광 숙박시설 특별법 적용으로 인해 관광호텔 등은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공공임대주택 매입대상 건축물들에 한해 기존 용적률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민간사업자의 토지 및 주택 취득세를 2022년까지 10% 감면하도록 해 공공 임대·전세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35.5% 역대 최저

리얼미터 조사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조사결과가 11일 나왔다. 국민의힘은 4월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에서도 모두 앞섰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전국 18세 이상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보다 3.1%포인트 오른 33.5%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0.4%포인트 하락해 29.3%를 기록

했다. 양당 지지도 차이는 4.2%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2.0%p) 밖이다.

YTN 의뢰 주간조사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12월 1주차에 민주당 지지도를 역전한 뒤 6주째 우위를 보이고 있다. 양당간 최대 격차는 12월4주차의 4.5%포인트였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과 부산을 보면 서울에서는 민주당 29.0%, 국민의힘 32.7%로, 국민의힘이 3.7%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주에는 양당 격차가 0.3%포인트 차로 좁혀지

도 했으나 다시 격차가 벌어졌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21.3%, 국민의힘이 38.8%로 나타났다. 그밖에 국민의당 8.0%, 열린민주당 5.4%, 정의당 4.8% 등의 순이었다.

또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전주 대비 1.1%포인트 내린 35.5%로 나타나 6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1.0%포인트 상승한 60.9%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새해 들어 60%를 상회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김승남,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개정안은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 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 형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동구 대인동, 싼 땅

(주)신세계오피스텔 H. 010-3605-5000

- ▶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 중심상업지역, 대지 515㎡(구, 156평)
- ▶ 지하 1층, 지상 9층, 64호실, 49㎡(14평) 오피스텔 허가 有
- ▶ 지하 1층 공사 中, PF 28억 확정
- ▶ 매매 - 토지 17억, 지하 공사비 3억, 총 20억
- ▶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조정 가능)